

민주화 이후 한국 정당경쟁의 이념적 차원 연구: 선거공약에 나타난 정책강조의 요인분석을 중심으로*

이지호 | 서강대학교

| 국문요약 |

이 글의 목적은 공약분석에 기초해 민주화 이후 정당 간 이념갈등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1992년부터 2017년까지 주요정당의 총선과 대선공약에 대한 내용분석과 요인분석이 수행되었다. 분석의 결과는 한국 정당의 이념갈등이 정치 영역의 '평화·민주'와 '국가안보', 그리고 경제영역의 '좌-우' 차원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발견은 국회의원 이념연구에서 나타난 '반공주의'와 '좌-우' 갈등을 공약분석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고, 여기에 더해 '민주주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탈물질주의 갈등은 정당 간 정책경쟁에서 드러나지 않고, 사회문화적 수준의 '권위주의 대 자유주의' 갈등도 정당수준의 이념갈등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대신에 권위주의와 자유주의 가치는 안보와 민주주의의 정치 이슈와 연관되고, 자유와 인권의 가치는 진보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분석 결과들이 전체적으로 주는 함의는 민주화 이후 한국 정당정치가 경제적 '좌-우' 갈등을 안착시킴과 동시에, 권위주의적 경향에 대한 경로의존성으로 인해 다양한 사회적 갈등의 동원에 결핍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주제어 | 공약측정, 내용분석, 요인분석, 이념갈등, 이념차원, 경로의존성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B5A02036397).

1. 서론

이 글의 목적은 정당의 선거공약¹⁾에 기초해서 민주화 이후 한국 정당의 정책 경쟁에서 나타나는 이념적 차원을 규명하는데 있다. 오늘날 한국 정치를 이해하는데 통용되는 이념적 개념은 진보-보수다. 대부분의 정치의식조사는 유권자와 정당의 이념성향을 진보-보수의 연속선상에 위치 설정함으로써, 투표행태 연구와 정당의 선거 전략에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념은 그 안에 다양한 속성을 담고 있다. 현실 세계에서 이념은 일차원이 아니라 다차원의 정책공간에서 발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정당의 선거공약에 나타나는 정책경쟁의 다차원 공간을 분석함으로써, 흔히 진보-보수로 지칭되는 이념이 정당 수준에서는 어떤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 글은 정당이 제시한 공약을 분석의 단위로 하는 만큼, 유권자 수준의 연구와 대비되는 정당 수준의 이념 연구다. 이 글이 정당 차원의 이념갈등에 주목하는 이유는 유권자 수준의 이념갈등을 정당이 대표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이고, 다른 한편으로, 이념갈등을 재생산하고 강화하는 역할도 정당이 하고 있다는 현실적 고려 때문이다.

정당 이념연구는 일반적으로 전문가조사와 공약분석으로 진행된다. 전문가조사는 주로 한국의 경우 국회의원 설문조사에 의존해 왔으며, 정당의 이념갈등 구조를 의원들의 주관적 이념과 정책 태도와의 상관성, 혹은 정당별 국회의원들의 정책태도의 차이로 파악한다. 즉, 일련의 국회의원조사에 기초한 이념연구(강원택 2005; 2012; 김정도 2009)는 대복지원, 한미동맹, 국가보안법 폐지, 재벌개혁, 복지확대, 사형제 폐지 등과 같은 정책 이슈에 대한 응답자의 찬반 태도와 진보-보수 이념성향과의 상관성을 비교하거나, 국회의원들의 이슈태도의 차이를 정당별로 비교함으로써 정당 간 이념갈등의 특성을 파악한다.

1) 선거에서 정당이 제시하는 정책 약속의 문서를 일반적으로 강령(manifesto)이라고 부르지만, 한국의 정당들이 제시하는 문서의 형태는 공약(pledge)이다. 이 글에서는 공약의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비교연구나 연구방법의 언급에서는 강령의 용어를 사용한다. 강령과 공약의 차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서술한다.

그러나 몇 가지 주어진 정책이슈에 대해 응답자의 태도를 묻는 국회의원 설문조사 방식은 정당의 수많은 정책 약속 가운데 강조의 차이를 분석하는 공약분석 방식에 비해, 실제 정당 간 정책경쟁의 이념 차원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슈마다의 정책대립을 가정하는 설문조사 방식은 정당이 꺼리는 정책 대조를 응답자에 강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측정이 정책 대립을 과장해서 드러낼 수 있다(Budge 1999). 이에 비해 공약분석방법은 설문 기반 이념조사와 달리 정당이 여러 정책을 놓고 강조를 달리함으로써 서로 경쟁한다는 보다 현실적인 정당경쟁의 가정에 기초한다(Budge and Farlie. 1977; Robertson 1976). 나아가 공약분석방법은 기간이 한정되는 국회의원조사와 달리 자료가 선거 시기마다 생산되기 때문에 분석 대상의 전 기간을 포괄한다. 선거공약에 기반한 이념연구는 비교강령연구의 코딩도식에 따라 텍스트를 분석하고, 요인분석을 통해 경쟁 차원의 이념적 속성을 규명한다. 초기 비교강령그룹(Manifesto Research Group)은 요인분석을 통해 서구 각국의 정당 간 경쟁의 이념 차원을 도출하고 이를 비교하였다(Budge et al. 1987). 이들 연구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19개 서구 민주주의국가에 좌-우 차원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이는 유럽의 근대화 과정에서 형성된 네 가지 주요 균열 중 가장 늦게 도래한 파급된 계급균열이 대부분의 국가에 유사하게 형성되었다는 립셋과 로칸(Lipset and Rokkan 1967)의 주장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구축한 것이다. 그러나 아시아, 남미 등 다른 지역의 정당경쟁에서도 좌-우 차원의 이념갈등이 발견될 것인지는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해 봐야 할 문제다.

공약측정에 기초한 한국 사례의 선행연구들은 1950년대부터 연구 시점까지 정당의 정책경쟁에서 나타나는 이념차원을 분석한다(현재호 2004; 이지호 2008). 이 연구의 의의는 정당 간 정책경쟁이 권위주의 시기에는 ‘민주주의 대 발전주의’의 차원에서 나타나고, 민주화 이후 진보-보수 차원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차원분석에 권위주의 시기의 선거공약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화 이후 시기에서 나타나는 이념갈등의 성격을 별

도로 밝히는 데 한계를 지닌다. 또한 이들 연구는 도출된 이념 차원에 놓인 정당의 위치와 움직임이 정당경쟁의 역사적 경험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다른 조사방식에 기초한 연구의 분석결과와는 어느 정도 유사한지를 밝히는 타당성 검증을 간과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는 민주화 이후 짧은 경과 기간과 이에 따른 자료의 부족에 기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민주화 이후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선행연구보다 더 많은 자료를 바탕으로 민주화이후 시기에 국한하여 정당 간 정책경쟁의 이념차원을 규명하고, 도출된 차원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시도한다. 분석의 범위는 1992년부터 2017년까지이며, 사용되는 자료는 주요 정당의 대선과 총선의 선거공약이다.

II. 이론적 논의와 연구방법

1. 이념갈등의 다섯 가지 차원

일반적으로 이념은 추상적인 좌-우(left-right) 혹은 보수-진보(conservative-liberal)와 같이 이분법적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이념은 사회의 여러 가지 근본적인 갈등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속성은 다차원적이다. 여기서는 현대사회에서 자주 등장하는 세 가지 갈등과 한국사회에 특수하게 적용될 수 있는 두 가지 갈등을 정당 수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념갈등으로 제시한다.

첫 번째는 현대사회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좌-우 대립이다. 균열이론에 따르면, 좌-우이념은 서구사회의 근대화 과정에서 형성된 주요한 사회 균열 중 서구 정당체계를 동질적으로 만든 ‘노동 대 자본’의 계급균열로부터 구축되고, 이후 다양한 사회경제적 갈등을 흡수하면서 오늘날 정치 이념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자리 잡았다(Knutsen and Scarbrough 1995). 좌-우 이념이 여러 속성을 담고 있지만, 탈근대사회를 대변하는 탈물질주의 가치(post-materialist value)

의 등장은 기존의 좌-우 개념을 물질주의적 좌-우(materialist left-right) 개념으로 다시 규정한다(Knutsen 1995). 따라서 자본 대 노동의 계급균열에서 출발하는 좌-우 개념은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가치 배분의 성격을 지니며, 시장자유 대 정부간섭, 분배 대 성장, 형평성 대 효율성 등의 대립적 가치를 포함한다.

두 번째로는 탈산업사회의 달라진 사회경제적 조건으로부터 형성된 ‘물질주의-탈물질주의’ 가치 갈등이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물질적 풍요를 경험한 전후 세대의 탈물질주의 가치와 물질적 가치의 배분을 추구하는 전전 세대 간의 갈등으로 나타난다(Inglehart 1977). 새로운 형태의 이 가치 갈등은 기존의 좌-우 정치를 가로지르면서 녹색당의 출현 등 서구 정당체계에 변화를 가져온다. 탈물질주의적 가치는 환경보호, 인종차별 금지, 동물보호, 성 소수자의 권리, 반핵 평화, 자기표현의 존중 등의 이슈로 나타난다. 한국에서도 일반 국민 대상으로 탈물질주의 가치 변화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졌고(어수영 2004; 김옥 2006), 미국산 쇠고기 촛불집회의 참여를 탈물질주의 가치의 정치적 표출로 분석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조기숙 2009). 그러나 국민 사이의 탈물질주의적 가치 변화가 사회적 갈등으로 나타나지만, 정당 간 갈등으로 진화하여 이념적 차원을 형성하는지는 의문이다.

세 번째 이념갈등은 ‘권위주의 대 자유주의’의 대립이다. 이는 전통적인 권위와 도덕에 대한 자유주의적(libertarian) 가치의 도전으로 형성되며(Flanagan 1987; Inglehart and Flanagan 1979), 1970-80년대 좌파 자유주의 정당의 출현을 설명한다(Kischelt 1988; 1994). 기존 권위에 대한 도전과 정치 참여로 표현되는 노무현의 등장 또한 이 이념갈등으로 설명된 바 있다(장훈 2004). ‘권위주의 대 자유주의’ 갈등은 개인적 수준에서는 검소함과 경건함에 대한 자유분방함과 세속주의로 나타나고, 사회적 수준에서는 순응과 의존, 권위에 대한 헌신과 대조되는 독립성과 자기주장, 권위에 대한 냉소로 나타난다(Flanagan 1987). 정책적으로는 법과 질서에 의한 강제보다 개인의 자유와 인권의 강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철폐와 평등, 정치적 참여 및 표현의 자유 등이 자유지상주의 가치를 대

변한다. 이는 탈산업사회와 정보화 사회를 관통하는 보다 폭넓은 개념으로 우리 사회에서도 감지되고 때로 정치적으로도 표출되는 가치갈등이다.

네 번째로는 한국의 역사적 특수성으로부터 구축된 ‘반공주의’ 갈등이다(강원택 2005). 이는 대북 인식, 남북관계의 재규정, 통일에 대한 방안을 둘러싼 이념 갈등으로 민주화 이후 일반 국민 사이에서나 정당 수준에서도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갈등으로 인식된다(강원택 2003; 김무경·이갑윤 2005; 이갑윤 2011; 문우진 2016). 이 갈등은 단순히 대북한 외교 및 군사 관계를 넘어 분단으로부터 오는 남한 내부의 이념갈등으로 볼 수 있다. 즉, 이러한 차원의 갈등에는 해방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 영향을 미친 미국의 역할, 안보를 위해 자유와 인권을 유보하는 문제 등이 놓여져 있다. 따라서 이 이념갈등은 북한지원과 남북평화 및 군축과 대별되는 북한 제재와 흡수통일, 군사력 강화, 한미동맹 등의 이슈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민주화 이후 정치 갈등의 또 다른 축으로 민주주의 갈등을 들 수 있다. 권위주의 시기에 가장 현저했던 ‘발전주의 대 민주주의’의 정당 균열은 민주화 이후 급속히 약화된다(이갑윤 1993; 이지호 2008). 통치세력이 경제발전을 위해 민주주의를 유보하고, 반대세력이 이에 맞서 자유와 민주주의 이슈를 제기하는 정당 간 대립이 쇠퇴한 것이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에도 인권과 민주개혁에 대한 이슈는 지속되고, 오히려 가장 인화성이 강한 정치 갈등으로 나타난다. 사법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정치부패 등이 이와 관련한 이슈들이다. 특히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퇴행적 통치 행태는 권위주의 시대로 돌아가는 듯한 ‘민주 대 반민주’의 정치 구도를 형성한다. 2016년 대통령 탄핵촛불집회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의 정당수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념갈등으로 [경제적 좌-우], [탈물질주의], [자유주의 대 권위주의], [반공주의]와 [민주주의]의 갈등 차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차원 중 앞의 네 가지는 국회의원 이념연구에서 적용하였고, 민주주의 갈등은 본 연구에서 추가한 것이다. 국회의원 이념연구의 분석 틀을

준용한 이유는 이미 정치엘리트 사이에 검증된 이념 차원으로 이 연구의 결과와 비교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 글은 현대사회에 보편적이고 한국적 특수성을 반영하는 5가지의 이념갈등이 정당 간 정책경쟁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정책장조의 차원분석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2. 공약의 내용분석

정당 간 정책경쟁의 이념적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이 글은 먼저 공약에 나타난 정책 진술을 분석한다. 공약 문서의 내용분석은 비교강령프로젝트의 표준분류도식(standard classification scheme)과 코딩절차를 따르되(MARPOR, 2014), 한국적 특수성과 시대변화를 반영해 몇몇 범주의 명칭을 수정한 분류도식을 사용한다. 분석에 사용된 분류도식은 <표 1>과 같다.

<표 1> 정책범주의 분류도식

정책 영역	정책범주	정책 영역	정책범주	정책 영역	정책범주
외적 관계	북한+	경제	자유기업	삶의 질	환경보호
	북한-		사업유인		문화
	군사+		시장규제		공평성
	군사-		경제계획		복지+
	평화		코포라티즘		복지-
	반제국주의→국가주권		보호주의+		교육+
	국제주의+		보호주의-		교육→교육자율
	국제주의-		경제목표		국가적 삶+
자유/민주	자유·인권	케인즈 경제	사회적 가치	전통적 도덕+	
	민주주의	생산성·성장		법과질서+	
	헌정주의+	기술·인프라		사회조화	
	헌정주의-	통제경제		다문화주의-	

정치 체제	지방분권	국유화→민영화 부정	사회 집단	법과질서-
	중앙집중화			다문화주의+
	정부효율성			국가적 삶-
	정치부패			전통적 도덕-
	정치적 권위	반성장주의		노동집단+
				노동집단-
				농어민
				중산층
				비특권집단
				비경제집단

*+/-의 표시는 해당 이슈에 대한 긍정과 부정을 의미.

분류도식은 [외적 관계], [자유와 민주주의], [정치체제], [경제], [삶의 질], [사회적 가치], [사회집단]의 7개 정책영역 하에 총 54개의 정책범주로 구성된다. 표준분류도식을 구성하는 정책범주는 56개이지만 ‘유럽연합 긍정’과 ‘유럽연합 부정’은 한국적 상황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한다. [외적 관계]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범주인 ‘특별한 관계’ 긍정과 부정에는 한국의 역사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북한을 설정한다. 이는 독일의 경우 동서독 분단시기에 서독과의 특별한 관계를 동독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Klingemann et al. 2006, 49). 표준분류도식의 ‘반제국주의’와 ‘국유화’는 오늘날 정치적 수사로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각각 ‘국가주권’과 ‘민영화 부정’으로 명칭을 바꾼다. 쉬운 의미전달을 위해 ‘교육부정’은 ‘교육자율’로 명명한다. ‘교육부정’이 ‘교육긍정’의 공교육 확대 및 평준화 교육의 반대 개념으로, 국가 통제로부터 교육의 자율성, 경쟁성 및 수월성을 강조하는 정책이슈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3. 정책선호 차이에 대한 요인분석

다음으로는 정당 간 정책선호의 차이에 대한 요인분석을 수행한다. 요인분석

은 변수들 간의 상호연관성을 분석해서 공통적으로 연관된 요인을 추출하여 전체 자료를 대변할 수 있는 변수의 수를 줄이는 통계기법이다(Kim and Muller 1976). 내용분석을 통해 얻어진 자료는 같은 공약문서에서 각각의 정책범주가 얼마나 많이 혹은 적게 언급되었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만약 두 개의 정책범주의 언급이 일관되게 함께 많아지거나 적어진다면, 둘은 체계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그 연계를 공유하는 다른 정책범주와 함께 특정한 정당갈등을 반영한다고 말할 수 있다.²⁾ 또한 특정 정책범주에 대한 언급이 일관되게 낮은 반면, 다른 범주에 대한 언급이 일관되게 높게 나타난다면, 직선으로 표출되는 특정한 갈등 차원(±연속선)을 추론할 수 있다.

요인분석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첫째, 정당 갈등의 성격을 의미하는 차원의 성격이다. 이것은 각 차원과 특별히 연관된 정책범주의 조합으로부터 추론된다. 두 번째로는 다차원 공간에 놓이는 선거 강령의 상대적 위치다. 이것으로부터 시간에 따른 정당위치의 움직임, 그리고 정당 간 수렴과 분산을 측정할 수 있다. 요인분석은 수많은 차원들을 요약하기 때문에 통계프로그램은 분산 비율(% of variance)을 통해 생성된 차원들이 얼마나 유용한지를 알려준다.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요인분석은 전체 선거공약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 이상이거나 개별 공약문건에서의 비율이 3% 이상인 정책범주만을 포함시킨다(Budge et al. 1987: 147). 정책범주의 평균 언급비율과 최대 언급비율에 따르면 (<부록 1-1> 참조), 전체 54개 범주 중 37개 범주만이 요인분석에 투입된다. 이러한 절차에 따르면, [사회적 가치] 영역의 정책범주들이 대부분 분석에서 배제된다. 그러나 이 연구가 주목하는 정당 간 이념갈등 중 하나가 [권위주의 대 자유주의]의 차원이기 때문에, 이와 연관되어 있는 [사회적 가치] 영역의 정책범주들을 두 가지 유사한 의미의 범주로 병합한다. 즉, ‘국가적 삶 긍정’, ‘전통적 도덕 긍정’, ‘법·질서 긍정’, ‘사회 조화’ 그리고 ‘다문화주의 부정’을 합쳐 ‘공동체질서’라는 새로운 범주를 생성하고, ‘국가적 삶 부정’, ‘법·질서 부정’, ‘전통적 도덕

2) 강령자료의 요인분석에 대해서는 버지(Budge et al. 1987: 28-30) 참조.

부정’, ‘다문화주의 긍정’을 ‘문화적 자유주의’의 개념으로 병합한다.³⁾ 또한 [반공주의] 갈등과 연관성이 높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언급비율이 낮은 ‘북한부정’은 국방력 강화를 의미하는 ‘군사긍정’과 병합하여 ‘안보’라는 새로운 범주를 생성하고, 군비축소를 의미하는 ‘군사부정’은 ‘평화’와 병합하여 ‘평화군축’으로 한다. 따라서 요인분석에는 총 36개의 정책범주가 투입된다.

분석대상인 공약 사례 수 48개는 투입되는 변수 36개에 비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이대로 요인분석을 진행하면 지나치게 많은 요인이 추출된다.⁴⁾ 뿐만 아니라 변수에 비해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으면 개별 사례가 추가되거나 제외되는 것에 의해서 도출되는 차원이 심하게 영향을 받고 불안정해진다. 따라서 분석은 정책경쟁의 이념적 구조를 보다 단순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2단계 요인분석을 수행한다. 1단계에서는 변수가 최대 14개 이하인 정책영역별로 자료를 요약하고, 줄여진 변수들은 2단계 요인분석에 투입하여 정당 간 차이와 움직임의 전체적인 그림을 얻는다.

4. 자료

1) 자료 선정의 타당성

정당의 위치 측정을 위한 분석 대상은 선거 시기 정당이 유권자에게 제시하는 정책적 선언의 구체적 진술이다. 실제로 매우 적은 유권자가 공약을 읽는다고 해도 공약에 담겨진 정책적 입장은 대중매체에 소개되고 방송의 정책 연설 및 토론을 통해 전달된다. 선거 시기 정당의 정치적 사상과 목표, 그리고 정책을 기록하고 있는 문서의 가장 모범적인 형태는 통상 전당대회에서 채택되는 선거강

3) 언급비율이 매우 낮은 [사회적 가치] 영역의 정책범주를 병합하는 방법은 정책선호로 유럽의회의 정당을 판별하기 위해 고안한 수정된 분류도식을 준용한다(Klingemann et al. 2006, 47-8, 참조).

4) 36개의 변수를 분석에 투입한 결과 10개의 요인을 추출하였고, 제1요인과 제2요인을 제외하면 8개 요인의 분산 값이 10% 이하였다.

령이다. 이들 문서는 국가마다 사정에 따라 다른 유사물(방송과 신문에서 정책을 알리는 대표 연설 혹은 인터뷰)로 대체되기도 하지만, 자료의 선정 기준은 정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표성(representation), 권위 있는 집단으로부터 승인되는 권위성(authority), 그리고 정책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종합성(comprehensiveness)이다(Budge 2013).

한국의 정당들이 선거 시기에 제시하는 문서는 외교, 정치, 민생, 경제 등 정책 영역 하에 구체적인 정책을 나열하고 있는 공약이다. 일반적으로 공약 형태의 문서는 강령보다 논쟁적 진술을 덜 담고 있어서, 선거 시기 정당 간 정책적 공방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약 상의 진술은 여러 정책 사안에 걸친 강조의 차이를 통해 정당 간 정책 선호와 이념 성향의 파악이 가능하다. 현저이론이 가정하는 것처럼(Budge et al. 1987, 24-8), 정당은 특정 정책에 대해 대립하기보다 특정 정책에 대한 강조와 탈강조(de-emphasis)를 통해 자신을 차별하기 때문에, 공약 상 진술이 정책 대립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해서 정당 간 이념차이를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또한 우리나라 정당들이 제시하는 공약은 당내 권위 있는 집단에 의해 만들어져 선거 시기 정당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대표하기 때문에, 정당대회에서의 채택 수준은 아니지만 앞에서 언급한 강령 측정 자료의 선정기준을 모두 만족한다.

2) 분석에 포함된 선거와 정당

이 글은 문민정부가 시작된 1992년부터 2017년까지 모든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를 분석에 포함한다. 분석 대상인 공약 문서의 수집은 전국 선거의 결과로 나타난 모든 ‘유의미한(significant)’ 정당을 포함한다. 비교강령연구는 사르토리(Sartori 1976, 121-5)가 제시한 ‘연합 형성 가능성’과 ‘협박 잠재력’을 감안하여, 분석에 포함되는 하나 이상의 선거에서 5퍼센트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한 정당을 주요 정당으로 간주한다(Budge et al. 1987, 31). 이 기준에 따라, 1992년부터 2017년까지 48개 정당의 공약을 분석한다.⁵⁾

분석은 48개의 정당 중 정치노선, 지지기반, 인물을 계승하면서 민주화 이후 선거에 지속적으로 출현한 정당을 ‘계열정당’으로 분류한다. 정당이 분당되었을 경우 두 정당 중 선거 결과 우위를 점한 정당을 명칭과 관계없이 계열정당에 포함시킨다. 따라서 1996년 민주당에서 분당된 새정치국민회의와 2004년 새천년 민주당에서 분열되어 나온 열린우리당을 같은 계열정당으로 취급한다. 계열정당의 명칭은 민주화 이후 해당 계열정당이 가장 많이 사용한 명칭으로 한다. 포함된 정당을 이렇게 분류하면, 민주화 이후 선거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4개의 계열정당 즉, 한나라당 계열정당과 민주당 계열정당, 민주노동당 계열정당, 그리고 자유민주연합 계열정당이 식별된다.⁵⁾ 차원분석이 민주화 이후 시기 선거에 참여한 모든 주요 정당을 포함하지만, 분석결과를 보여주는 그림은 단순한 시각화를 위해 4개의 계열정당만을 포함한다.

III. 분석 결과

1. 1단계 요인분석

이 장은 앞 장에서 논의한 다섯 가지 차원의 이념갈등이 실제 선거공약 상의 정책경쟁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정당 간 정책 강조의 차이를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수행한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요인분석은 두 단계 과정을 밟는다. 1단계에서 정책영역별로 요인분석의 결과로 추출된 요인 중 설명력이 가장 높은 2개의 주요 요인만을 2단계 요인분석에 투입한다. 이는 정책경쟁의 이념적 구조를 보다 단순하게 표현하기 위함이다(Budge et al. 1987, 33). 그리고 정책영역별 요인분석에서 오직 하나의 요인만이 추출되는 경우나, 앞에

5) 분석에 포함된 정당과 공약자료는 <부록 1-2>을 참조.

6) 계열정당의 명칭은 민주화 이후시기 동안 해당 계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명칭을 사용한다. 분석에 포함된 주요 계열정당은 <부록 1-3>을 참조.

서 언급한 전체 공약이나 개별 공약에서의 비율 기준에 만족하는 정책범주가 2개 이하인 경우, 원래의 정책범주를 그대로 2단계 요인분석에 투입한다. 이러한 절차와 원칙에 따라 1단계 요인분석에서는 [외적 관계], [경제], [삶의 질], 그리고 [사회집단]의 각 영역에서 2개씩 총 8개의 요인이 추출되었고,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분산비율 값을 제외한 표의 수치는 각 요인에 대한 정책범주의 상관계수다. 따라서 높은 수치는 해당 요인과 양의 방향 혹은 음의 방향에서 상관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적 관계] 영역에서 추출된 제1요인은 ‘북한 긍정(0.76)’과 ‘국가주권(0.66)’ 그리고 ‘평화균축(0.89)’과 양의 방향에서 상관성이 높다.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 정책, 강대국에 대해 국가 주권을 강조하는 정책, 그리고 적대국과의 대화와 협상, 군비축소를 지향하는 정책이 함께 언급되는 이 차원을 ‘자주 평화’로 해석한다. 제2요인은 국방력 강화와 북한에 대한 경계 등을 의미하는 ‘안보(0.83)’와 미·일 등 주변국과의 협력을 뜻하는 ‘국제협력(0.87)’이 동시에 강조되는 태도로서, 이 차원을 ‘안보외교’로 명명한다. 이로써 외적 관계 영역에서도 추출된 두 가지 갈등 축은 2장에서 논의한 [반공주의] 갈등 차원과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대북관계를 둘러싼 반공주의 갈등이 정당 간 정책경쟁에서 반영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다음으로 [경제] 영역에서 추출된 제1요인은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강조하는 ‘자유기업(0.78)’과 은행 및 주식시장에 대한 지지를 의미하는 ‘경제적 정통성(0.88)’에 높은 상관성을 보인다. 또한 국가의 경제 능력을 의미하는 ‘경제목표(0.61)’와 ‘기술과 인프라(0.41)’도 양의 방향에서 적재된다. 반면, 반독점, 공정거래, 소상공인 보호 등을 포함하는 ‘시장규제(-0.48)’는 음의 방향에서 상관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차원의 성격을 ‘시장경제’로 명명한다. 한편, 제2요인은 정부간섭에 의한 물가안정, 환율통제 등을 가리키는 ‘통제경제(0.77)’와 공기업과 공공사업에 대한 ‘민영화 부정(0.74)’, 자유무역을 견제하는 ‘보호주의 긍정(0.78)’의 범주가 강하게 적재된다. 따라서 이 요인을 ‘국가간섭’으로 해석한다.

[경제]영역에서 도출된 두 가지 갈등 축, ‘시장경제’와 ‘국가간섭’은 2장에서 논의한 [경제적 좌-우]의 이념차원과 일치한다. 민주화 이후 정당 간 정책경쟁이 경제적 좌-우 차원에서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1단계 요인분석 결과

외적 관계	제1요인 (자주평화)	제2요인 (안보외교)	경제	제1요인 (시장경제)	제2요인 (국가간섭)
북한 긍정	.76	.24	자유 기업	.78	-.03
국가주권	.66	-.43	사업 유인	.30	-.22
안보	-.18	.83	시장 규제	-.50	.28
평화군축	.89	-.22	보호주의 긍정	.10	.78
국제협력	.05	.87	보호주의 부정	-.00	-.12
			경제 목표	.61	-.24
			생산성, 성장	-.08	.03
			기술과 인프라	.41	-.43
			통제 경제	-.07	.77
			민영화 부정	-.23	.74
			경제적 정통성	.88	.08
분산비율	43.9	27.3	분산비율	33.6	14.8
삶의 질	제1요인 (환경과 문화)	제2요인 (복지정의)	사회집단	제1요인 (노동자 vs. 농어민)	제2요인 (비경제집단)
환경 보호	.71	-.03	노동	.67	-.15
문화	.78	.16	농어민	-.78	.06
공평성	-.56	.44	비특권소수자	.63	.64
복지 확대	-.07	.79	비경제인구집단	-.32	.86
교육 확대	-.03	.08			
교육 자율	-.31	-.68			
분산비율	25.5	23.9	분산비율	38.9	29.7

* 요인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 회전 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

[삶의 질] 영역에서 추출된 제1요인은 ‘환경 보호(0.71)’와 ‘문화(0.78)’를 많이 강조할 때, ‘공정성(-0.56)’을 덜 언급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사회정의와 소수자 차별금지를 가리키는 ‘공정성’은 탈물질주의 가치에 속한다. 같은 가치에 속하는 속성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적재되고 있다. 따라서 이 요인은 탈물질주의로 정의하기 힘들다. 여기서는 양의 방향에서 적재된 두 범주 이름을 따서 ‘환경과 문화’로 명명한다. 제2요인에서는 ‘복지 확대(0.79)’와 ‘공정성(0.44)’이 양의 방향에서 높게 적재되고, 자율적이고 경쟁적인 교육을 강조하는 ‘교육 자율(-0.68)’이 음의 방향에서 높게 적재된다. 따라서 이 차원을 ‘복지정의’로 명명한다. 이로써 복지와 평등에 대한 강조여부가 정당 간 갈등의 또 다른 축임을 알 수 있다.

[사회집단] 영역에서 추출된 제1요인은 노동자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가리키는 ‘노동집단(0.67)’ 및 ‘비특권소수자(0.63)’와 양의 방향에서 높게 적재된다. 그러나 이 요인에서 농어민에 대한 우호적 언급을 의미하는 ‘농어민(-0.78)’은 음의 방향에서 높게 적재된다. 이 세 범주 중 둘이 경제 집단인 노동자와 농어민을 대변하는 정책범주이기 때문에 이 차원을 ‘노동자 vs. 농어민’으로 명명한다. 한국 정치에서 ‘노동자 vs. 농어민’의 차원이 주요한 정당 간 갈등으로 나타나는지 의문이지만, 이는 이익집단정치에서 노동자와 농어민에 대한 상대적인 배려의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농어민’이 이념적으로 중립적인 범주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요인은 [경제적 좌-우] 차원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집단 영역의 제2요인은 여성, 노인, 청년 등에 우호적 정책을 의미하는 ‘비경제인구집단(0.86)’과 장애인, 외국인민자 등을 보호하는 정책을 가리키는 ‘비특권소수자(0.64)’가 양의 방향에서 크게 적재됨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차원을 ‘비경제집단’으로 명명한다.

2. 2단계 요인분석

두 번째 단계 요인분석은 1단계에서 추출된 위의 8개 요인과 2개 이상의 요인

이 추출되지 않은 [자유와 민주주의], [정치체제] 및 [사회적 가치]의 영역에서 분석의 투입 기준(평균 1% 언급과 최빈 언급 3% 이상)을 통과한 원 범주를 포함한다. 이 원칙에 따라 투입된 원 범주는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 ‘헌정주의 부정’, ‘지방분권’, ‘정부효율성’, ‘정치부패’, ‘정치적 권위’, 그리고 ‘공동체질서’다. <표 3>은 2단계 요인분석의 결과를 보여준다.

<표 3> 2단계 요인분석의 결과

정책범주	제1요인 (평화·민주)	제2요인 (경제적 좌-우)	제3요인 (국가 안정)	제4요인
자주평화	0.69	-0.09	-0.48	0.03
안보외교	-0.19	-0.24	0.85	-0.13
자유·인권	0.78	0.29	-0.15	-0.07
민주주의 긍정	0.70	0.19	-0.41	0.12
헌정주의 부정	-0.19	-0.21	0.11	0.02
지방분권	0.17	-0.23	0.74	-0.28
정부 효율성	-0.13	-0.63	0.48	-0.24
정치부패	0.55	0.22	0.02	0.43
효율적 권위	-0.05	-0.01	0.01	0.90
공동체질서	-0.32	-0.07	0.83	0.12
시장경제	-0.30	-0.89	0.10	-0.17
국가간섭	0.40	0.71	-0.15	0.29
환경과 문화	-0.05	-0.20	0.36	-0.63
평등추구	-0.20	0.86	-0.21	-0.13
노동자 vs. 농어민	0.55	0.72	0.02	0.11
비경제집단	-0.83	-0.11	-0.10	0.06
고유값	3.38	3.32	2.82	1.72
분산비율	21.1	20.7	17.6	10.8

* 요인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 회전 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

분석 결과, 2단계 요인분석은 네 가지 이념차원을 보여준다. 최종 요인분석에서 나타난 이들이 민주화 이후 정당의 공약 상에 나타나는 정책경쟁의 이념적 차원을 말해준다. 제1요인에서 양의 방향으로 크게 적재되는 범주는 ‘자주평화(0.69)’, ‘자유와 인권(0.78)’, ‘민주주의(0.70)’, ‘정치부패(0.55)’, ‘노동자 vs. 농어민(0.55)’이며, 음의 방향에서 크게 적재되는 범주는 ‘비경제집단(-0.83)’이다. 따라서 제1요인은 자주·평화와 민주주의, 노동자에 대한 이슈들을 많이 언급하는 정도에 대조적으로 비경제집단에 대한 지원 정책을 적게 진술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다른 말로 하면, 노인, 여성, 장애인 등 비경제사회집단에 대한 지원보다 한국사회에서 전통적으로 정치적 진보를 대변하는 이슈를 우선시하는 정책태도인 것이다. ‘자주·평화’는 1단계 요인분석에서 보았듯이, ‘북한공정’, ‘군축과 평화’ 그리고 ‘국가주권’과 연관성이 높은 요인으로 [반공주의] 갈등 축의 진보 영역에 속하는 정책이슈이다. 다른 한편, ‘자유·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정치부패’는 [민주주의]를 둘러싼 갈등 요소다. 따라서 제1요인을 ‘평화·민주’로 명명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탈물질주의나 자유주의의 가치를 나타내는 ‘자유·인권’이 민주주의 갈등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2단계 요인분석에서 정치적 차원의 ‘평화·민주’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도출된 것은 대북관계와 국가보안법의 이슈를 둘러싼 정당 간 이념갈등이 가장 크고 지속적이라는 국회의원 이념연구의 분석 결과(강원택 2012; 김정도 2009)와 일맥상통한다. 또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자유·인권’이 한국 정치에서는 평화와 민주주의 같은 좌의 정책범주와 강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자유와 인권이 우의 영역에 속하는 비교강령연구의 표준 좌-우 척도⁷⁾와 상반되는 결과로, 한국정치의 역사적 경험에 대한 경로의존성(path-dependency)의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권위주의 시기에 야당으로만 존재했던 민주당 계열정당이 자유와 인권을 강조해 왔고, 이러한 이슈 제기에 대한 소유권(ownership)이 민주화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화 이후 권위주의 통치 형태의 인권탄압은 줄어들었지

7) 비교강령연구의 표준 좌-우 척도는 버지(Budge et al. 2001, 22) 참조.

만, 개인사찰, 블랙리스트,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 여성과 성소수자의 인권 등은 여전히 쟁점으로 등장하고, 통상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계열정당이 이들 이슈를 선점해 왔다.

두 번째로 추출된 요인은 ‘시장경제(-0.89)’와 ‘정부효율성(-0.63)’과 음의 방향에서 상관성이 높고, ‘국가간섭(0.71)’과 ‘평등추구(0.86)’, 그리고 ‘노동자 vs. 농어민(0.72)’과는 양의 방향에서 상관성이 높다. 이 차원은 국가의 시장 개입에 반대하고 공공서비스를 효율화한다는 신자유주의 경제노선을 한편으로 하고, 국가 조정,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반대, 자유 무역에 대한 보호주의 강화, 복지확대와 공평성 추구, 노동집단과 비특권 소수자 지원을 강조하는 태도를 다른 한편으로 하는 갈등 축을 의미한다. 이는 경제영역에서 전형적인 좌-우 이념대립을 보여주는 것이다. 권위주의 시기를 포함한 선행연구는 ‘복지확대’를 제1요인으로 도출하고, ‘사민주의’를 설명력이 낮은 제5요인으로 추출한다(현재호 2004, <표 7> 참조). 그러나 민주화 이후 시기만을 별도로 분석한 한 결과는 제2요인으로 경제적 자유주의 대 사민주주의의 대립을 보여준다. 이는 민주화 이후 정당 간 정책경쟁에서 경제적 자유주의가 부상하고 사민주주의와 대립하는 이념갈등이 구축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세 번째 요인은 ‘안보외교(0.85)’, ‘공동체질서(0.83)’, ‘지방분권(0.74)’과 상관성이 높다. 앞의 1단계 요인분석에서 보았듯이, ‘안보외교’는 국방력 강화와 북한 핵 폐기 및 인권개선, 우방외교 강화와 같은 정책들과 결합되어 있고, ‘공동체질서’는 애국주의, 법·질서 강화, 전통적 윤리와 도덕적 가치, 갈등보다는 조화를 강조하는 정책들과 연관되어 있다. 지방자치의 안착을 추구하는 태도와 함께 이 두 번째 요인을 ‘국가안정’이라고 명명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세 번째 차원이 ‘공동체질서’가 ‘안보외교’와 결합되어 있어, 우리 사회에서 흔히 인지할 수 있는 정치적 보수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2장에서 제시한 [권위주의 대 자유주의] 차원과 다른 모습이다. [권위주의 대 자유주의]의 이념차원이 확인되려면, ‘국가적 삶’, ‘전통적 도덕’, ‘법·질서’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문화적 자유주의’가 ‘공동체 질서’와 반대 방향으로 높은 상관성을 보여야 한다. 그러나 ‘문화적 자유주의’는 이러한 속성을 가진 정책범주들을 병합했음에도 불구하고 언급 비율이 매우 낮아 요인분석에 투입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요인은 ‘효율적 권위(0.90)’와 양의 방향에서 상관성이 높고, ‘환경과 문화(-0.63)’와는 음의 방향에서 상관성이 높게 나타난다. ‘효율적 권위’는 강하고 안정적인 정부의 필요성, 해당 정당의 통치 능력과 상대 정당의 그러한 능력 결여를 강조하는 진술을 가리키며, 비교강령연구에서는 좌-우 척도의 좌의 영역에 포함시킨다. 그러나 이 정책범주는 한국의 정당 공약에서 매우 적게 언급되고(평균 0.57%), 문화와 환경보호는 많이 강조된다. 이러한 조건에서 효율적 권위가 많이 강조될 때, 문화와 환경보호가 적게 언급되는 것은 정당의 이념에 기초한 일관된 정책 의도로 보기 힘들다. 오히려 우연히 그러한 현상이 공약 상에 나타났다고 보아도 무방하다.⁸⁾ 따라서 네 번째 차원에 대한 해석은 분석에서 제외한다.

다차원의 정책공간에서 요인들이 지니는 설명력은 ‘평화·민주’가 21.1%이며, ‘경제적 보수 대 진보’는 20.7%, ‘국가 안정’은 17.6%로 나타난다. 따라서 세 요인의 총 분산은 59.5%로 전체 정책공간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 요인분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한국의 정당 간 이념 갈등의 성격은 자주·평화와 민주주의 가치가 결합된 정치적 진보와 반공주의와 권위주의가 결합된 정치적 보수, 그리고 경제적 좌와 우의 갈등 축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3. 세 가지 이념차원에서 정당의 위치와 움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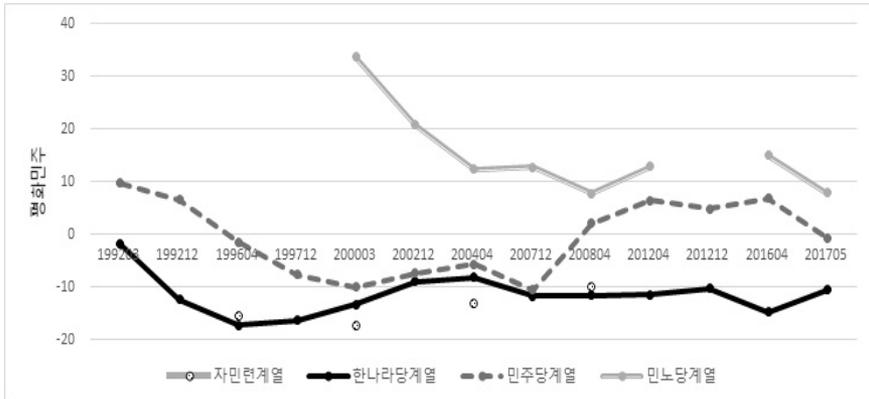
이 절은 요인분석으로부터 도출된 세 가지 주요 차원 - ‘평화·민주’, ‘경제적 진보 vs. 보수’, ‘국가안정’ - 에서 나타나는 주요 계열정당의 위치와 움직임을

8) 공약분석 자료에 의하면, 48개 공약 중 29개의 공약에서 ‘효율적 권위’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언급 비율이 높은 4개의 공약에서 문화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매우 적게 나타났다.

1992년 총선부터 2017년 대선까지 시계열로 비교함으로써, 민주화 이후 정당 간 정책경쟁의 양상을 살펴본다. 이는 주어진 차원이 민주화 이후 한국 정당정치의 역사적 증거들과 얼마나 잘 부합하는지를 보여주는 시도으로써, 세 이념차원에 대한 타당성 검증이기도 하다. 강령측정의 액면타당성은 주로 세 가지 기준에서 평가한다(Budge and Meyer 2013, 92). 첫째는 도출된 차원에서 정당들의 위치가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정당의 이념성향에 부합하는가 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시간에 따른 정당의 움직임이 중요한 역사적 흐름 혹은 국민적 분위기(national mood)를 반영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이념차원 상의 정당 위치가 특정 선거에서 정당이 취한 전략적 선택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림 1>은 2단계 요인분석의 제1요인인 ‘평화·민주’의 차원에서 주요 계열정당의 움직임을 시계열로 보여준다. 그림의 0점 축에서 위쪽의 위치는 여성, 노인, 장애인 등 비경제집단에 대한 우호적 언급을 덜 강조하는 대신 국가주권과 평화 및 민주주의 이슈를 더 많이 강조하고, 아래쪽의 위치는 정치적 진보의 이슈를 강조하는 대신 비경제집단에 대한 지원 정책을 덜 언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2>에서 보았듯이, 양대 정당의 선거공약에서 외교와 정치 개혁 관련 정책이 비경제집단에 우호적인 정책보다 훨씬 덜 언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당 위치가 위쪽에 놓이는 것은 평화·민주의 이슈가 특별히 많이 강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화·민주 차원에서 세 계열정당은 서로 간의 거리를 뚜렷이 유지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계열정당은 가장 위쪽에서 양대 정당과 거리를 유지하고, 한나라당과 자유민주연합 계열정당은 일관되게 음의 영역에 위치하면서 민주당 계열정당과도 거리를 둔다. 따라서 이 그림은 민주노동당 계열정당이 강대국에 대한 주권, 한반도 평화와 통일,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해 가장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민주당 계열정당은 민주노동당 계열정당보다 더 온건하며, 한나라당과 자유민주연합 계열정당은 이들 이슈에 대한 강조가 다른 두 계열정당보다 훨씬 더 약하다는 일반적 인식을 확인해 준다.



〈그림 1〉 ‘평화·민주’ 차원의 정당위치

시기별로 보면, 민주당 계열정당은 야당일 때(1992년-1996년, 2008년-2016년) 평화-민주 이슈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여당일 때(2000년 총선에서 2007년 대선시기)는 그 이슈를 덜 강조한다. 이러한 경향은 민주당 계열정당이 야당일 때 남북문제나 민주주의 문제를 제기해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경향이 강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있는 여당일 때는 정치적 이슈보다는 사회집단을 지원하는 정책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반면에 자유민주연합과 한나라당 계열정당은 평화-민주 이슈에 대한 언급이 전 기간에 걸쳐 저조하다. 그만큼, 이들이 남북 평화와 군축 및 민주주의와 인권 이슈에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정치적 사안에서 이념 갈등이 심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 2000-2004년 사이에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양의 방향으로 조금 이동하지만 한나라당이 민주당 계열정당의 위치에 근접하여 양대 정당 간 거리가 좁혀진 것이다. 이 시기에 민주당 계열정당은 남북정상회담,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 SOFA 개정 촛불시위, 대통령 탄핵 등의 영향으로 남북 평화정착과 민주주의 이슈를 많이 강조하여 ‘평화·민주’ 차원에서 양의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반면에, 야당인 한나라당은 정부의 보수언론 탄압, 도·감청, 햇볕정책에 대응하는 인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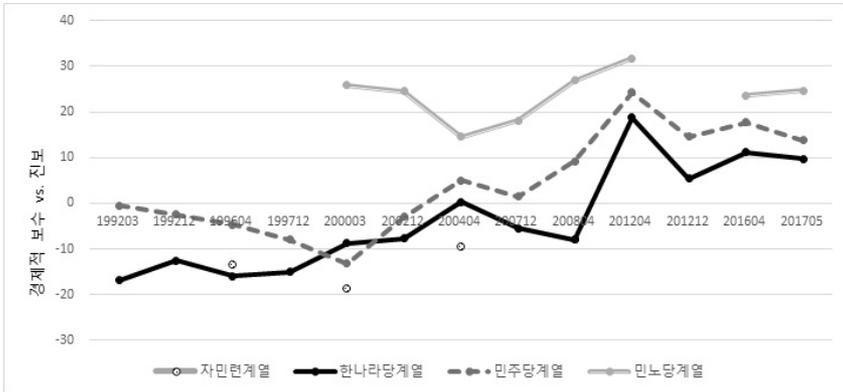
지원과 남북경협 정책, 탄핵 역풍 대응 차원의 국회개혁을 강조하면서 민주당 계열정당의 위치에 가까이 갔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시기(2008-2016년)에 양대 계열정당 사이에 ‘평화·민주’ 차원의 이념 거리는 눈에 띄게 벌어진다. 이 시기의 양대 정당 간 차별화는 야당인 민주당 계열정당에 의해 주도된다. 미국산 쇠고기 파동과 세월호 참사,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한 대중적 저항의 분위기에서 민주주의 이슈를 강하게 제기하고, 남북한 대화 단절의 상황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크게 강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17대 국회의원들이 16대와 18대 국회의원들보다 대북지원, 한미동맹, 국가보안법 등 외교안보영역의 정책태도에서 민주당 계열정당과 한나라당 사이의 거리를 더 좁혔고, 19대 국회에서 그 거리를 크게 벌렸다는 국회의원조사의 분석과도 맥을 같이 한다(강원택 2012; 15).

<그림 2>는 ‘경제적 진보-보수’ 차원의 정당 위치와 움직임을 보여준다. 그림의 0점 축 위의 위치는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고 정부개입을 줄이는 정책을 덜 강조하는 대신 시장경제의 국가 조정, 공공서비스의 확대와 공평성 추구, 노동집단에 우호적인 정책을 더 많이 강조하고, 아래쪽 위치는 그 반대의 정책태도를 의미한다. 전체적으로 주요 계열정당들은 경제적 좌-우 차원에서 뚜렷한 거리를 두고 있다. 민주노동당 계열정당은 가장 위쪽에서, 한나라당과 자유민주연합 계열정당은 아래쪽에서 큰 폭의 거리를 유지하고, 민주당 계열정당은 대체로 그 사이에 위치한다. 이는 경제정책에서 민주노동당 계열정당이 가장 진보적이고 한나라당 계열정당이 가장 보수적이며, 민주당 계열정당이 중간 위치한다는 일반적인 인식을 확인해 준다.

주요 정당들의 위치가 보여주는 전체적인 특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수에서 진보로 이동한다는 것이다. 이는 주요 정당에서 모두 ‘자유기업’, ‘기업유인’과 같은 시장경제활성화 정책보다 복지확대 정책의 강조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는 계열정당들의 공약에서 복지정책의 언급 비율이 경제정책보다 훨씬 높은 것에서도 알 수 있다(<표 1> 참조). 국민의 복지수요는 늘어나고 정당이 이에

부응하는 모습이다. 공약에서의 강조만큼 복지예산이 늘어나진 않지만, 이에 대한 실증 연구는 정부가 거듭될수록 복지예산이 늘어나고 있음을 발견한다(현재호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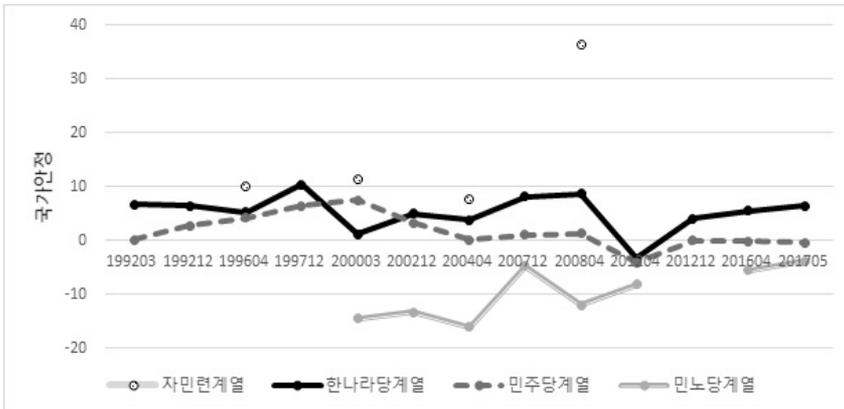


〈그림 2〉 ‘경제적 좌-우’ 차원에서의 정당 간 경쟁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1992년부터 2000년 사이에 민주당 계열정당의 우경화다. 이는 김대중 정부시기에 여당인 민주당 계열정당이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개혁 정책을 따르고, 경제회복을 위한 기업 활성화 정책을 많이 강조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시기 열린우리당은 양극화와 사회안정 문제 등에 관심을 돌리면서 좌선회하고, 당시 한나라당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실제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협상과 타협을 통해 장기요양보험과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실행에 옮긴다(이지호 2012). 그러나 참여정부 당시 한나라당의 정책 기조는 2007년 이명박 정부의 등장과 함께 우경화하고, 양대 정당 간 이념 거리는 크게 벌어진다. 이러한 그림은 참여정부 경제정책의 반대편에서 신자유주의적 이념성을 강하게 드러낸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정책에서 한나라당의 보수적 기조는 이명박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한 새누리당 박근혜 대표의 등장과 함께 2012년 총선에서 급격히 좌선회한다. 당시 새누리당은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경제민주화 이슈를 제기하였다. 같은 해 대선에서 좌경화 경향은 둔화되었지만, 그 기조는 유지되어 새누리당의 위치는 0점 축 위에 놓인다. 한편 민주당 계열정당은 새누리당의 좌경화에도 불구하고 더 위쪽에서 거리를 유지한다.

이러한 공약분석의 결과는 설문조사에 기초한 국회의원 이념연구의 분석결과와 유사하다. 국회의원조사에서 경제이념 차원의 한나라당 이념평균은 16대 국회에서 4.93(0-매우진보, 5-중도, 10-매우보수의 10점 척도), 17대에서 5.55였으나, 18대 국회에서 7.01로 강한 보수적인 색채를 띠었다가, 19대 국회에서는 4.80으로 진보적 성향을 보인 것이다(강원택 2012, 17). 경제이념이라는 같은 개념에 대한 다른 방법의 측정이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림 3> ‘국가안정’ 차원에서의 정당 간 경쟁

<그림 3>는 요인분석의 세 번째 요인인 ‘국가안정’ 차원에서 정당의 위치와 움직임을 보여준다. 요인점수가 양의 방향으로 커질수록 ‘안보외교’, ‘정부효율

성’, ‘법과 질서’와 같은 정치적 보수의 이슈가 더 많이 강조되고, 음의 방향으로 커질수록 덜 강조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차원에서 주요 계열정당의 간극은 앞의 두 차원에 비해 크지 않다. 그러나 2000년 총선을 제외하고 모든 선거에서 네 계열정당은 일관된 이념적 배열을 보인다. 가장 보수적이라고 알려진 자유민주연합 계열정당은 한나라당보다 더 위에 위치하고, 가장 진보이라고 알려진 민주노동당 계열정당은 민주당 계열정당보다 아래에 위치한다.

민주당 계열정당의 움직임은 보면, 1996년 총선에 민주당 계열정당의 보수화는 북핵 위기로 인한 대중적 분위기의 보수화와 연관된다. 또한 2000년 총선 당시 새천년민주당의 ‘국가 안정’ 이슈에 대한 강조는 야당으로 있을 때보다 정부 효율성과 국방을 더 많이 강조하여 집권여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이려는 태도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2004년 총선 이후민주당 계열정당은 이 척도의 0점 주변에서 비슷한 위치를 유지하는 데 반해, 한나라당 계열정당은 그들의 집권 시기 동안 대체로 민주당 계열정당과 간격을 벌린다. 이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유지했던 대화단절의 대북 강경노선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요인분석에서 도출된 세 가지 이념 차원을 민주화 이후 한국정치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살펴보았다. 각각의 이념적 차원에서 주요 계열정당은 대체로 서로 간 거리를 유지하고 있고, 그 위치는 정당의 이념성향에 대한 일반적 인식에 부합한다. 한나라당과 자민련 계열정당은 각 차원에서 보수의 영역에 위치하고, 민주노동당 계열정당은 가장 진보적인 위치에 놓이며, 민주당 계열정당은 이보다 온건한 위치에 머무른다. 분석은 또한 시간에 따른 이들의 움직임이 민주화 이후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나 국민적 분위기를 대체로 반영하고, 선거에서 정당이 취한 중요한 전략적 변화를 일정하게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공약 측정은 또한 설문조사에 의한 국회의원 이념 측정과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는 동일한 개념에 대한 다른 방법의 측정이 비슷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으로, 강령분석에서 나타난 이념차원의 타당성이 액면타당성 이외의 방법으로도 입증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IV. 결론: 요약과 논의

이 글의 분석 결과는 민주화 이후 정당 간 정책경쟁의 이념차원이 정치영역의 ‘평화·민주’와 ‘국정안정’, 그리고 경제영역의 ‘좌-우’ 차원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발견은 이론적 논의에서 제시한 [민주주의] 갈등과 [반공주의] 갈등 그리고 [경제적 좌-우] 대립이 정당수준의 이념갈등에서 반영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는 국회의원 설문조사에서 발견한 ‘반공주의’와 ‘좌-우’ 갈등을 정당의 공약분석을 통해 다시 확인한 것이다. 권위주의 시기를 포함한 공약측정과 비교하면, ‘반공주의’ 갈등은 민주화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고, ‘발전주의 대 민주주의’의 갈등은 민주주의 퇴행과 진전을 둘러싼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경제영역의 이념대립은 권위주의 시기에 포함한 분석에서 ‘복지 확대’의 한 방향 차원의 갈등, 즉 복지확대에 대한 강조의 차이로 나타난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시기만 별도로 분석한 이 글에서 ‘시장 자유 대 국가 조정’의 좌-우 차원으로 발견된다. 이명박정부 당시 정부의 신자유주의 노선의 강조와 민주통합당의 좌편향이 이념적 간극을 넓힌 것처럼, 민주화 이후 경제영역에서는 경제적 자유주의가 부상하여 사민주의와 대립하는 양상을 띤 것이다. 이는 선행 연구의 시점으로부터 10년의 자료를 더 추가하여 민주화 이후 시기만을 분석한 결과다.

한편, 분석은 [탈물질주의] 갈등이 정당 수준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탈물질주의 가치에 속하는 ‘군사부정’과 ‘평화’는 ‘북한공정’과 ‘민주주의’ 등 반공주의 혹은 민주주의 가치와 연관되어 있고, ‘환경보호’와 ‘공정성’ 및 ‘비특권 소수자’는 서로 연관성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추론이 가능하다. 하나는 유권자 수준에서 탈물질주의 가치 갈등이 존재하는데, 정당 수준의 갈등에서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마찬가지로 국민 사이에서 존재하고 실제로 정당이 이를 동원하고 있는데, 공약측정이 이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탈물질주의 가치는 국회의원조사에

서도 확인되지 않는 것처럼(강원택 2005), 페미니즘, 소수자 인권, 그리고 최근에 부상하는 동물권 보호 등이 사회적 갈등으로 존재하지만 정당 간 경쟁의 이념차원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다음으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국회의원조사에서 발견된다는 [권위주의 대 자유주의]의 갈등이 정당의 공약분석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권위주의적 속성으로 볼 수 있는 ‘공동체질서’는 이 글의 분석에서 ‘안보’와 결합되어 정치적 보수주의의 성격을 띤다. 이렇게 분석되는 이유는 정당들이 자유주의적 가치를 나타내는 정책범주를 공약 상에 거의 언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하나는 국회의원조사에서 확인된 것처럼, 정당 엘리트 수준에서 이 갈등이 존재하지만 공약측정의 방법이 이를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정당이 ‘권위주의 대 자유주의’ 갈등을 거의 동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조사 방식이 이를 과장했을 가능성이다.

공약분석에서 자유지상주의를 나타내는 ‘국가적 삶 부정’, ‘전통적 도덕 부정’, ‘법·질서 부정’과 같은 부정의 범주는 정책으로 잘 구현되지 않는다. 이는 다른 부정의 범주, 즉 ‘복지 부정’, ‘노동 부정’ 등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정책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공약에서 부정의 범주가 매우 드물게 분류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정당이 어떤 사회적 갈등을 동원하고 있다면 공약의 형식을 변경하고서라도 공약 상에 이들을 표출한다. 예컨대 저출산·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생애주기성 사회정책의 요구가 많아지자, 정당은 공약의 기존 형식을 바꾸어 이를 강조한다. 국회의원조사에 대한 의심은 설문조사 방식이 국회의원들에게 자유주의를 가리키는 호주제, 사형제 및 안락사 등에 대한 찬반태도를 묻기 때문에 응답의 결과가 정당 엘리트 사이에 이 갈등이 크게 존재하는 것처럼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당 차원에서는 이 사안들에 대해 대립적 태도를 취하지 않을 수 있는데 개별 국회의원 사이에서는 갈등이 심한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권위주의 대 자유주의]와 관련해서 주목해 보아야 할 또 다른 점은 권위주의의 속성인 ‘공동체질서’가 ‘안보’와 결합되고, 자유주의의 한 속성인 ‘자유·인권’

이 ‘민주주의’와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사회적 혹은 문화적 차원인 [권위주의 대 자유주의]의 갈등이 한국에서는 정치적 진보와 정치적 보수의 차원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권위주의와 자유주의의 가치는 각각 경로의존성을 지닌 반공주의와 민주주의 갈등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인권은 민주화 이후에도 진보의 영역에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정치를 설명하는 보수-진보의 척도가 서구를 중심으로 고안된 비교강령연구의 표준척도와 다르게 구성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민주화 이후 정당 수준의 주요 이념갈등 중 두 가지 차원이 반공주의와 민주주의에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정당들이 권위주의 경험의 흔적을 여전히 지닌 채,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동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 글은 정당의 정치적 대표성 연구의 일환으로 정당 간 정책경쟁에서 나타나는 이념적 차원을 규명하였다. 그러나 분석은 정당과 유권자의 조응성을 측정할 수 있는 보수-진보의 척도 구성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비교강령연구에서 사용하는 좌-우 표준척도의 한국적 적용의 문제와 보수-진보 척도의 재구성에 관한 연구는 후속연구의 과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 강원택. 2003. 『한국의 선거정치: 이념, 지역, 세대와 미디어』. 서울: 푸른길.
- _____. 2005. “한국의 이념 갈등과 진보·보수의 경계.” 『한국정당학회보』 4권 2호, 193-217.
- _____. 2012. “제19대 국회의원의 이념성향과 정책태도.” 『의정연구』 18권 2호, 5-38.
- 김무경·이갑윤. 2005. “한국인의 이념성향과 갈등.” 『사회과학연구』 13권 2호, 6-31.
- 김육. 2006. “탈물질주의와 민주주의: 한국과 일본의 정치문화 변동 비교.” 『한국정당학회보』 5권 2호, 89-124.
- 김정도. 2009. “정당간 이념갈등에 대한 경험적 연구.” 『21세기정치학회보』 19권 3호, 145-169.
- 문우진. 2016. “한국 선거경쟁에 있어서 이념갈등의 지속과 변화: 15대 대선 이후 통합자료 분석.” 『한국정당학회보』 15권 3호, 37-60.
- 여수영. 2004. “가치변화와 민주주의의 공고화: 1990-2001년간의 변화 비교연구.” 『한국정치학회보』 38권 1호, 193-214.
- 이갑윤. 1993. “한국 정당제의 이데올로기적 성격.” 『사회과학연구』 2집, 93-113.
- _____. 2011. 『한국인의 투표형태』. 서울: 후마니타스.
- 이내영·허석재. 2010. “합리적인 유권자인가, 합리화하는 유권자인가? 17대 대선에 나타난 유권자의 이념과 후보선택.” 『한국정치학회보』 44권 2호, 45-67.
- 이지호. 2008. “한국 정당경쟁의 이념적 차원: 권위주의시기와 민주주의시기의 비교.” 『한국과 국제정치』 24권 4호, 95-126.
- _____. 2012. “기초노령연금정책의 의제설정과 정책결정에 관한 인지지도분석: MSF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6권 1호, 49-72.
- 장훈. 2004. “한국 참여민주주의의 발전과 과제: 진보·자유지상주의의 등장과 한국 민주주의의 압축 이동.” 한국정치학회 2004년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조기숙. 2009. “2008 촛불집회 참여자의 이념적 정향: 친북반미좌파 혹은 반신자유주의?” 『한국정치학회보』 43권 3호, 125-148.

- 현재호. 2004. “정당 간 경쟁연구: 1952-2000.” 『한국정치학회보』 37권 2호, 189-215.
- _____. 2008. “한국사회의 이데올로기 갈등: 정치적 대표체제로서의 정당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2권 4호, 213-241.
- _____. 2011. “민주화 이후 정당정치: 정당, 유권자 그리고 정부.” 『한국정치연구』 22집 3호, 81-108.
- Budge, Ian. 1999. “Expert judgements of party policy positions : uses and limitations in political research.” Colchester: Department of Government, University of Essex.
- _____. 2013. “Linking Uncertainty Measures to Document Selection and Coding.” Volkens, Andrea, Judith Bara, Ian Budge, Michael D. McDonald, Hans-Dieter Klingemann, eds. *Mapping Policy Preferences from Texts III: Statistical Solutions for Manifesto Analyst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udge, Ian and David Farlie. 1977. *Voting and Party Competition: A Theoretical Critique and Synthesis applied to Surveys from Ten Democracies*. London and New York: Wiley.
- Budge, Ian, David Robertson, and Derek Hearl, eds. 1987. *Ideology, Strategy and Party Change: Spatial Analyses of Post-War Election Programmes in 19 Democraci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lanagan, Scott C. “Value Change and Partisan Change in Japan: The Silent Revolution Revisited.” *Comparative Politics* 11(3): 253-278.
- Inglehart, Ronald. 1977. *Silent Revolution.: Changing Values and Political Styles among Western Politic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Inglehart, Ronald. and Flanagan, Scott. 1987. “Value Change in Industrial Societi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1(4): 1289-1319.
- Kim, Jae On and Charles W. Mueller. 1976. *Factor analysis*. Beverly Hills: Sage.
- Kischelt, Herbert P. 1988. “Left-Libertarian Parties: Explaining Innovation in Competitive Party Systems.” *World Politics*. 40(2): 194-234.
- _____. 1994. *Transformation of European Social Democrac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Klingemann, Hans-Dieter, Andrea Volkens, Judith Bara, Ian Budge, and Michael D. McDonald, eds. 2006. *Mapping Policy Preferences 2: Estimates for Parties, Elections and Governments, Eastern Europe, European Union, and OECD 1990-2003*.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Knutsen, Oddbjørn. 1995. "Left-Right Materialist Value Orientations." Jan W. Van Deth and Elinor Scarbrough, eds. *The Impact of Valu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Knutsen, Oddbjørn and Elinor Scarbrough. 1995. "Cleaveage Politics." Jan W. Van Deth and Elinor Scarbrough, eds. *The Impact of Valu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Lipset, S. M. and S. Rokkan. 1967. "Cleaveage structures, party systems and voter alignments: an introduction." Samuel. M. Lipset, and Stein Rokkan, eds. *Party Systems and Voter Alignments*, 1-64. New York: Free.

MARPOR. 2014. "Manifesto Coding Instructions (5th revised edition)."
https://manifesto-project.wzb.eu/down/papers/handbook_2014_version_5.pdf
(검색일: 2020.01.12.)

Robertson, David. *The Theory of Party Competition*. London & New York: Wiley.

Sartori, Giovanni. 1976. *Parties and Party Systems: A Framework of Analy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투고일: 2020.03.04.	심사일: 2020.03.25.	게재확정일: 2020.03.26.
------------------	------------------	--------------------

〈부록 1-1〉 정책범주의 평균 언급비율과 최대 언급비율(N=4)

정책범주	평균	최대값	정책범주	평균	최대값
복지+	15.27	27.27	국가주권	0.68	7.37
기술과 인프라	7.15	18.97	경제적 정통성	0.67	3.96
교육+	6.64	16.73	교육 자율	0.66	4.88
농어민+	6.03	15.15	군사-	0.60	3.13
환경보호	5.33	10.45	정치적 권위	0.55	6.59
비경제집단	5.28	14.21	북한-	0.53	11.94
사업유인	5.18	17.41	보호주의-	0.46	5.97
시장 규제	4.81	11.63	보호주의+	0.38	6.58
노동집단+	4.72	14.84	사회조화	0.35	2.65
문화	3.70	8.56	민영화 부정	0.28	3.59
공정성	3.16	7.74	코포라티즘	0.24	1.29
민주주의	3.84	9.01	중산층과 전문직	0.23	1.25
자유와 인권	2.46	9.82	전통적도덕성+	0.19	2.97
시장경제	2.31	9.09	지속가능한 성장	0.18	1.96
정부효율성	2.16	6.06	다문화주의 긍정	0.14	1.67
북한+	1.99	7.76	현정주의-	0.12	3.18
정치부패	1.87	8.57	현정주의+	0.06	1.48
비특권 소수자	1.85	7.26	국가적 삶 방식+	0.05	0.63
지역분권	1.79	7.46	법과 질서-	0.04	0.67
군사+	1.65	4.81	경제 계획	0.02	0.70
법과 질서+	1.58	14.93	노동집단-	0.02	0.45
국제주의공정	1.39	7.46	국제주의-	0.02	0.48
경제 목표	1.36	5.00	전통적도덕성-	0.02	0.45
생산성과 성장	1.27	6.57	케인즈적 경제	0.02	0.45
자유기업	1.19	7.58	민주주의 부정	0.02	0.53
통제 경제	0.96	3.58	마르크스분석	0.00	0.00
평화	0.86	3.19	복지-	0.00	0.00

<부록 1-2> 분석에 포함된 정당과 선거공약

정당 명칭	선거년월	공약제목
민주자유당	199203	조선일보. 1992. 제14대 국회의원선거 자료집.
민주당	199203	
통일국민당	199203	
민주자유당	199212	조선일보. 1993. 제14대 대통령선거 자료집.
민주당	199212	
통일국민당	199212	
신한국당	199604	21세기 세계일류국가 건설
새정치국민회의	199604	경제 제1주의를 제창합니다
통합민주당	199604	민주당이 이겨야 나라가 산다
자유민주연합	199604	국민을 편하게 하는 정치, 보람된 삶을 위하여
한나라당	199712	깨끗한 정치, 튼튼한 경제, 힘있는 나라
새정치국민회의	199712	국난 극복과 내일의 번영을 위한 당신과 나의 약속
국민신당	199712	국민신당 정책공약집
한나라당	200003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든다.
새천년민주당	200003	새천년의 약속
민주노동당	200003	우리 아이들에게 다른 세상을
자유민주연합	200003	부강한 나라, 건강한 사회
새천년민주당	200404	국민과의 약속: 깨끗한 정치·안정된 생활·함께 사는 사회
자유민주연합	200404	자유민주연합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집
민주노동당	200404	민주노동당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집
한나라당	200712	일류국가 희망공동체 대한민국
대통합민주신당	200712	가족이 행복한 나라
창조한국당	200712	사람중심나라 건설을 위한 문국현의 112개 약속
민주노동당	200712	제17대 대통령선거 민주노동당 정책공약집
한나라당	200804	2008 한나라 비전과 실천
통합민주당	200804	서민과 중산층이 잘 사는 나라
창조한국당	200804	사람중심의 대한민국 재창조
자유선진당	200804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정당 정책·공약 모음집
민주노동당	200804	"서민도 좀 먹고 삽시다!"
새누리당	201204	진심을 품은 약속
민주통합당	201204	내 삶과 대한민국을 바꾸는 민주통합당의 정책 비전
통합진보당	201204	1% 특권 해체! 99% 민생행복!
새누리당	201212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있는 변화
민주통합당	201212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

새누리당	201604	앞으로! 하나로! 함께 누리는 미래로!
더불어민주당	201604	더불어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
국민의당	201604	국민의당 제20대 총선 공약집
정의당	201604	정의로운 대한민국
자유한국당	201705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키는 힘
더불어민주당	201705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의당	201705	국민이 이긴다
바른정당	201705	바른 생각으로 만드는 모두의 대한민국
정의당	201705	노동이 당당한 나라

<부록 1-3> 주요 계열정당

	한나라당 계열정당	민주당 계열정당	민주노동당 계열정당	자유민주연합 계열정당
1992년 국선	민주자유당	민주당		
1992년 대선	민주자유당	민주당		
1996년 국선	신한국당	새정치국민회의		자유민주연합
1997년 대선	한나라당	새정치국민회의		
2000년 국선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민주노동당	자유민주연합
2002년 대선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민주노동당	
2004년 국선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자유민주연합
2007년 대선	한나라당	대통합민주신당	민주노동당	
2008년 국선	한나라당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
2012년 국선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2012년 대선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2016년 국선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2017년 대선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Ideological Dimensions of Party Competition in Korea, 1992~2017

Lee, Ji-Ho | Sogang University

Using the methodology of manifesto estimate, this paper investigates the nature of ideological conflicts reflected on policy preferences of Korean parties since democratization. The main finding is that ideological conflicts among political parties are introduced into the three dimensions of ‘peace-democracy’, ‘national security’ and ‘economic left-right’. The analyses also show that the oppositions of post-materialist vs. materialist values and authoritarianism vs. libertarianism are not appeared on the policy competitions among parties. This result of the study suggests that the left-right dimension has been settled in policy competition since democratization, while the other societal conflicts have been little mobilized. It is also implicated that the post-democratization politics in Korea reveals a progress and a deficiency simultaneously in terms of political representation.

Key Words | Manifesto Estimate, Factor Analysis, Party Competition, Ideological Conflict, Ideological Dimension